

과거사, 5·18 발표명령자 밝혀낼까

검찰 수사기록 공개여부에 달려

5·18 발표명령자는 항상 발발 26년이 지나도록 베일에 가려져 있다. 5·18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사안이다. 발표명령자를 규명하는 작업은 항간의 설 이상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7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죄를 위한 조사가 아닌 역사 바로잡기라는 진실 규명 차원에서 5·18 발표명령자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5·18, 그 사건의 가장 큰 의혹인 발표명령자를 국가기관이 규명하겠다고 공식 천명함으로써 광주·전남지역민과 5월 관련 단체들은 진상 규명에 그 어느 때 보다 기대를 걸고 있다.

◇발포명령자 어떻게 조사하나= 1980년 당시 군부 실세들은 군의 특성상 발표명령자를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신군부 핵심들은 지금까지 본인들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고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진술만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의 이틀 군 최고 지휘자들에게 대한 조사 대신 집단발포 상황이 벌어졌던 1980년 5월 21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급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집합적 진압을 했던 군 부대와 부대원들을 직접 조사하기로

발포현장 병사·장교들부터 逆順 조사 진압 참가 군인들 양심 선언에도 기대

결정했다.

도청 앞에 배치됐던 부대와 함께 현장에 투입된 일반 사병의 명단이나 최소 분대장, 소대장 등 장교의 명단을 확보해 역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26년 동안 풀리지 않는 의혹 '발포명령자'=계엄군의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에 대해 당시 진압군 관계자들은 국회청문회 등을 통해 "무장 시민들의 사격에 위협을 느낀 공수부대원들이 자위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우발적인 발포"였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고 있다.

89년 열린 5·18 국회청문회는 참사 지휘관들이 한결같이 '군 자위권 발동', '시민들의 선제 공격에 대한 우발적 대응'이라는 진술로 일관해 정작 발표명령자에 대한 실체에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다.

또 검찰도 95년 7월 5·18 고소·고발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당시 공수부대장교들이 대대장이나 지역 대장의 통제없이 장갑차 등에 대응해 자위 목적으로 발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만 밝혀 의혹만을 키웠을 뿐이다. 12·12와 5·18 사건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 신군부 일당이 사법처리됐지만 유독 발표명령자만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지난 해 군 과거사 진상 규명위원회와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이 5·18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04년 서울 중앙지검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12·12 및 5·18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면서 5·18진압군 이를 등 발표명령자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기록들은 공개하지 않아 사건 발발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표명령자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없는 상태다.

◇조사의 한계와 전망=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는 위원회가 서울 중앙지검에 요청한 30만쪽에 달하는 12·12 및 5·18사건 수사기록을 넘겨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서울 중앙지검은 지난 200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사기록을 공개하면 80년 5·18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군 작전일지 ▲전투상보 ▲지휘관 회의록 ▲광주진압군 명단(연대장 이상만 공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22만 쪽에 달하는 미공개 서류에 발표명령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들어 있는 셈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요청을 서울 중앙지검이 거부할 경우 사실상 발표명령자에 대한 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서울 중앙지검의 협조와 함께 당시 진압에 참여했던 이들의 양심적인 고백에 상당한 희망을 걸고 있다.

김갑배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은 "검찰로부터 서류를 넘겨받아 진압에 참가했던 관련자들을 출석시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면서 "당시 진압에 참가했던 군인들이 자기 고백을 통해 역사적 진실 규명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도청앞 집단발포=80년 5월 18일 이후 광주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간헐적인 총격이 있었다. 이 중 집단발포는 80년 5월 21일 오후 1시에 급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진압군이 시위대를 향해 계획적·집단적으로 발포를 시작한 사건을 말한다. 발표 명령자만 당시 발포가 계획적으로 행해진 만큼 현장의 지휘관이 아닌 당시 군부의 고위 지휘관자가 발포를 지시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 나온 말이다.



17일 경기도 광명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열기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즉석 삭발을 하며 이효선 시장의 망언을 규탄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호남인 뭉쳐 지역차별 몰아내자”

광명시장 망언 규탄대회 이모저모

이효선 광명시장의 전라도 비하 망언 규탄 국민 열기대회가 열린 17일 오후 광명시 실내체육관 광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호남 향우들의 발걸음으로 가득했다. 안산, 평택, 철원, 포천 등 경기도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호남 향우회원들을 태운 40여 대의 버스가 실내체육관 인근에 도착할 때마다 참석자들의 박수가 터지며 흥분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친척들과 함께 행사장에 온 유순자(여·66·광명시)씨는 “호남을 비하하고 지역감정을 선동한 광명시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참석했다”며 “호남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호남 향우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보니 가슴이 북받쳐 온다”고 말했다.

광명에서 왔다는 이모(46)씨는 “광명시장의 발언은 전라도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러니만큼 호남인들이 더욱 뭉쳐 망국적인 지역차별에 저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날 행사장에는 타지에서 전라도 사람으

로 살면서 알게 모르게 당해왔던 서러웠던 이야기도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다.

포천에서 사는 김모씨(54)는 “DJ 정권 이후 전라도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지워졌으나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서러움을 많이 받았었다”며 “이번 광명시장의 발언은 지역차별이라는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며 분개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효선 광명시장 사퇴 촉구 서명 부스에는 무더위에 대다수의 참석자가 줄을 서서 서명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행사장 곳곳에서는 초면에도 참석자들이 서로 자신의 고향을 이야기하며 손을 마주 잡는 등 화기에 애환이 가득한 모습이 연출됐다.

광주에서 왔다는 최모(45)씨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거리낌 없이 꼭 전국 호남 향우대회에 온 것 같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의 지역차별적 언행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화순군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양덕승 회장(48)이 말을 타고 이순신 장군 복장으로 행사장에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집단희생 사건들 당사자 나서야 진실 규명”

송기인 진실·화해 과거사위원장

“폭도로 매도됐던 광주 5·18 열사들의 명예가 회복됐듯이 우리 모두 과거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서 과거의 억울함을 벗고 올바른 명예회복을 위해 광주시민들이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진실 규명 사건 광주설명회를 위해 광주를 찾은 송기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역에서도 많은 집단 희생 사건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저희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이제 60여건에 불과하다”면서

“신청 사건 접수 마감인 오는 11월30일까지 해당분들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광주교도소의 경우에는 한국전쟁 당시에는 집단학살이 있었고, 70년대에는 장기수에 대한 전향공작을 발미로 인권유린 사건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또한 광주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인근 지역인 담양, 장성, 화순, 나주 등지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추가 접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또 “진실화해위원회

가 출범하고 나서 여러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실규명 신청 접수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혹시나 또다시 피해를 받는 게 아닌가”하는 국가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 보상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 접수를 망설이는 경우가 주변에 많다”고 우려했다.

송 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진실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제대로 치유가 된다”면서 “그동안 제대로 된 진실규명의 기회가 없었듯이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란 심정으로 피해 당사자를 비롯한 광주·전남지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17일 광주를 방문한 송기인 과거사 위원장이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 진상규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해기자 choi@kwangju.co.kr

盧대통령 계속되는 ‘스킨십 정치’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부쩍 늘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12일 당 원내·중진급 의원들과 만찬회동을 가진데 이어 16일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고, 18일에는 문광위 소속 의원들과 저녁을 함께 할 예정이다.

내주초에는 법사위원들과의 만찬회동이 계획돼 있고, 나머지 상임위 소속 의원들도 내달 3일 해의순방 출국 이전에 한차례씩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스킨십’의 밀도도 높아 보인다. 여권이 맞닥뜨린 정국현안을 직접 의제로 삼아 서로 고민을 나누고 ‘종지’를 모으는 자리가 되고 있다는게 여권의 관측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인사파동을 거친 이후 생각을 바꾼 것 같다”며 “당과 허심탄화하게 소통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의제로는 전직 작전통제관 환수와 한미 FTA 등 정치권내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정책·입법현안이 망라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8일 문광위원들과의 만찬회동에서는 자연스럽게 정국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라있는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 경질 논란이 거론될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권내에서는 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가 당·청간 소통의 흐름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노 대통령이 입법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 의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넓힘으로써 당·청이 서로 ‘의기투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활력이 행복!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활력비타민, 페콤씨! 하루 2알 페콤씨와 함께 활력이 찬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Ben-Happy, 페콤씨!

아침·저녁 하루 2알

우리나라 우리가족의 힘- 페콤씨



바탕엔 부작용 없는 천연비타민입니다. (112-380-1115 www.benhappy.com)

광고심의필 (076-2000) *본문은 호국보훈처 및 나눔문화보육재단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유한양행 소비자 상담실 (02-394-1188) *이메일: info@benhappy.com *부산: 051-1100-4673 *대구: 052-720-0513 *경주: 052-750-3400 *대전: 042-527-3300

* 페콤씨에 함유된 비타민B군계 페티비타민은 수송성비타민으로서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